

사설

공원입장료 마찰 외면말라

국·도립공원의 입장료를 둘러싸고 관리사무소 측과 사찰, 신도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입장료징수를 관련규정에 의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사찰이나 신도들은 제 집에 드나들거나 종교활동을 하는데 입장료를 내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최근 경북 청양군에서도 입장료 문제로 마찰이 벌어져 사찰과 신도 측에서 부당징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도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공원구역에 출입하는 스님이나 신도들에 대한 입장료 징수 철폐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리사무소측이 내세우는 관련규정이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4항 입장료 면제기준에 '당해공원구역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에 한해서만 입장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 상주 스님이나 타 사찰

신도는 당연히 징수대상에 포함된다 는 주장이다.

둘어보면 국·도립공원 지역은 명산대찰이 자리잡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사찰소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부에서 공원지정을 해놓고 입장료를 받으며 주인공세를 하려하니 사찰이나 신도 측에서 보면 가당치않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사찰소유입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느 쪽이 진짜 주인이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먼 산 구경하듯 해서는 안될 것이며, 조계종에서도 문화관광부나 환경부, 지자체에 협조공문만 띄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불교라는 종교의 신행 특징이 특정 사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에게는 전국의 모든 절이 수행처이자 생활의 장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5억원을 아끼는 추경예산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70~80%가 불교와 연관이 있다. 1,600여년 동안이나 불교는 한국 민족의 사상적·문화적 모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 유산의 고갱이를 이루는 불교문화재는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 모두가 알뜰히 보살피고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 하루가 멀다하고 문화재의 도난이나 도굴사건이 반복된다. 여기에 도난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이고, 그 중 94.8%가 비지정문화재임을 감안하면 문화재 일제조사 시급한 사안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 탓일까. 문화재청에서 작년부터 비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각 사찰에 산재해 있는 성보나 문화재를 올해부터 7개년 계획으로 정밀조사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문화재청이 추경예산으로 신청한 불

교문화재 일제조사비 5억원이 최근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당초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없지 않았으나 올해의 경우 '불교문화재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 등으로 교계 인력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억원의 문화재조사비가 올 추경예산에서 제외돼 버리니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불교계도 문화재 일제 조사에 국가 예산이 보조되면 더욱 좋을 일이지만 국가 예산 타령만 하고 미룰 일 또한 아니다. 종단과 사찰차원에서라도 비지정 문화재 보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에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 5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에 올리겠다고 한다. 내년에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배정을 정부에 촉구한다.

외국인 사찰안내 조직 만든다

국제포교사 등 120여명 8~9월 결성 월드컵·부산 아시안게임때 불교홍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연합조직이 발족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국제포교사회 주최로 6월 23~24일 이틀간 해인사 흥제암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연합연수'에 참가한 국제포교사, 예비포교사, 사찰자원봉사자, 관광통역가이드 등 120여명의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자들은 올 8~9월 중으로 외국인 사찰안내 연합조직을 발족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선 업스님(국제포교사회 부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부위원장은 조계사

한 네트워크와 정기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되며, 언어영역(영어, 일어, 중국어 등)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조직은 조계종 본사급 사찰을 포함한 지역별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중앙조직과 연계시키는 형태로, 중앙에서는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조직은 포교원 내에 위치하게 된다.

준비위원장 업스님은 "불교홍보도 통일돼 있지 않고, 사찰이해를 돕는 프로그램도 부족해 그동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사찰안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사찰안내를 위해 연합조직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학 연구 중단 지원 필요"

전공교수 워크숍서 제기

불교학 전공 교수들이 종단차원의 불교학 연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대 상운)이 6월 27~28일 이틀간 봉화 청량사에서 열린 '불교전공 교수 초청 산사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 교수들은 불교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종단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불교학을 이끌어갈 인재양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룡(서울대·이중표(전남대)·이진오(부산대)·차승후(원불교대학

해외파견 국제포교사 13~16일 한국문화체험

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제2회 해외파견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부산, 통도사, 석굴암 등에서 개최된다.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홍보함으로써 민간교역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포교사들에게 한국문화와 불교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승려법·계단법 제정 선학원 임시이사회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6월 2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승려법과 계단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학원이 제정한 승려법은 승려의 정의, 승려증 발급기준, 승려 권리와 의무, 포상과 징계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 계단법은 계단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계단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수계의 자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학원은 독자적인 승려법과 계단법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조계종단이 지난해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승려분한신고 접수만 받고 승려증 발급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범어사 갈등국면 심화

원로회합 성오스님 징계 새주지 선출 운영위등 수용않고 임시집행부 구성

범어사 운영위원회와 종무원 회의는 6월 27일 종무소 회의실에서 범어사 문도 운영 회의를 열어 성오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임시집행부를 선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성오스님을 파문조치하고 새주지로 대성스님을 결정할 22일 원로스님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차후 원로스님측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24호 1면 뉴스속속취조)

종원스님, 벽파스님, 홍교스님 등 현 집행부와 조계종 총무원 후보부 조사국장 스님을 비롯 3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성오스님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9월 중순 새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산중총회가 열리게 되는 과도 기간동안 임시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종원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영환, 인걸, 정여, 제천 스님 등 14명의 위원으로 종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종무대책위는 이날 즉석에서 회의를 열어 부주지 영환스님, 재무 정여스님, 총무 범산스님으로 임시집행부를 구성했다.

또한 새주지 선출은 종헌 중법에 따라 9월 20일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 후보를 지명한 뒤 종단법규에 따른 산중총회를 거쳐 승인받기로 했다. 종원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범어사를 걱정하는 원로스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야 하나 종헌 중법상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년승가연합스님은 "범어사의 최고 권위를 가진 원로스님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원로회의에서 기능이 정지된 종무원회의와 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찰환경 침해 대응 모색

서울 경기 강원 주지 연수

해인사사태 조사 촉구도

서울 경기·강원 본발사 주지 연수회가 교육원 주최로 6월 27~28일 이틀간 양평 남한강 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는 주지스님의 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과 함께 종단의 주요 종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두 195명의 세 지역 본발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참가 주지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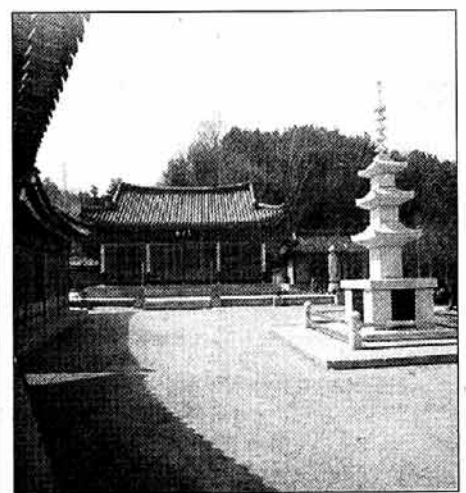
'바람직한 불사' 토론회

종신회 11일 조계사서

조계종 중앙산도회(회장 백창기)는 11일 오후 2시 '현행 불사문화의 점검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철승 조계종 성보전문위원이 '지금의 불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광래 총내대교수가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 모색을 위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백남석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재가연대 포교사단 불교산악인연합회 등 교계 16개 단체도 6월 28일 3차 회의를 갖고 18일(예정) 해인사 청동대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갈월사 경내



정문 ▼

갈월사 영탑(靈塔)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탐궁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